전북의 미래, 도민과 함께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지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있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2026년 신년 도정 추진 방향과 실적에 대해 서면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어느 해 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김관영 도지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 올해 전북도정의 약속 '여민유지'… 도민 뜻 받들 것
> 지난해 예상치 못한 상황 속 도민 생계 지키는데 주력
>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전북의 브랜드 가치 올릴 모멘텀
> 금융·농생명 두 축 중심 2차 공공기관 전북 유치 준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확보 위해 재정분권 필요
> 도민들의 소박한 꿈 현실로 만드는 것, 전북도정의 목표

Q.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께 전하는 신년 인사와 올해 도정의 핵심 방향은?

-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전북도정의 약속은 '여민유지(與民由之)' 입니다. 모든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고 오직 도민의 뜻을 받들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운으로 전북의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도민의 삶 속에 와닿고 살림살이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Q.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추진한 민생 안정 대책의 성과는?

- 불법 계엄, 조기 대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민 생계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1·2차에 걸쳐 총 5,129억원 규모로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1차에는 소득별로 1인당 18~45만원을 맞춤형 지급했고, 2차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해 가계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 1조 3,384억원의 특례 보증 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조4,5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종합보험 무료 지원과 풍수해보험 자부담 100% 지원을 시행합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지난 2년간 전북 특별법을 기반으로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75건의 사업을 마련했으며, 과거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행정 결정을 도에서 직접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농생명 산업지구와 산악관광지구 등 14개 지구의 인허가 및 개발 권한이 도지사에게 직접 위임됐습니다.

이를 통해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한방, 고창 김치 특화 지구 등이 속도감 있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Q. 민선8기 기업유치 17조원 돌파 후 실제 투자 이행 상황은?

- 기업 유치는 협약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민선 8기 체결한 212건의 협약 중 39건은 이미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입주 계약이나 건축 중인 85건을 포함하면 전체의 58% 이상이 실질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투자 준비 중인 69건을 합치면 전체의 91%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점검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투자보조금의 30~50%를 선지급하는 제도도 활용합니다.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착공부터 가동까지 걸림돌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Q.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은?

- 이번 후보 도시 선정은 '서울을 이길 수 없다' 는 뿌리 깊은 회의론을 무너뜨렸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성공 DNA를 도민께 심어주는 계기였습니다. 올림픽 유치 활동은 K-컬처와 K-푸드의 본향인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시장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후 정부 및 대한체육회와 완벽한 '원팀' 이 되어 본격적인 국제 유치 경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전북의 저력을 증명하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 2026년 국가 예산 1,200억원이 반영된 것은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우리 도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실제 착공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소송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Q.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은?

- 지난해 10월 대광법 개정·시행으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되면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전주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 구상을 본격화하고,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총 15개 사업, 약 2조 2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전략과 타깃 기관은?

- 공공기관 유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특화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관을 가져와야 성과가 납니다.

금융과 농생명,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유치를 준비합니다.

금융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에는 1,3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누적 수익률이 20%를 돌파하며 지역에서도 충분히 금융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농생명 분야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이 압도적입니다. 농협중앙회를 유치해 행정-연구-산업을 아우르는 농업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우리 도내 5개 말산업 특구와 새만금 단지를 연계하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Q. 완주·전주 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충남 통합처럼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국가적 역사 과제로 규정하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속도가 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완주·전주 통합도 이 흐름과 함께 가면 됩니다. 통합 결정이 반드시 주민투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완주군의회 의결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1월 내에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2월 특별법 제정을 거쳐 통합단체장 선거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재정 분권과 자치권한 특례를 최대 범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Q.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계획은?

-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과 3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특별지자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특별지자체 추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행히 3개 시군 모두 특별지자체의 필요성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안을 토대로 특별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를 넓히고, 시군 및 정치권과 끈기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은?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소멸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시도하는 담대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총 1,708억원을 투입하는데, 분담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도에서 전체 예산의 30%를 확실히 책임지고 부담합니다. 올해 도비 256억원을 투입해 사업의 안정성을 완벽히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근본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농어촌 수요 지표를 대폭 반영하도록 요청해 농어촌 지역 지원 규모를 끌어낼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정밀 분석해 확대 시행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Q. 지사님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전북은?

- 도지사로서 꿈꾸는 '살기 좋은 전북' 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좋은 직장을 잡아 결혼하고, 주말마다 3대가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전북도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 인 일자리가 해결돼야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기업 계열사 7개를 포함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돌봄과 교육도 도가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부터 3~5세 무상보육을 전국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2026년에는 2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급식비도 인상해 보육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의료 격차 해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5년 남원에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고 정읍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내년도 관련 예산 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Q.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할 핵심 의제는?

- 대통령님과의 타운홀 미팅이 성사된다면 전북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의제를 건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를 최우선으로 꼽겠습니다. 올림픽은 K-컬처와 K-푸드의 본향인 전북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모멘텀입니다. 전북 주도의 올림픽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K-이니셔티브' 의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에 관한 도민들의 의지도 강력히 전하겠습니다. 수출기업들에 RE100은 이제 생존전략입니다. 새만금은 이미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최적지입니다. 새만금 제1산단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탄소중립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확실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피지컬AI는 미래 제조 기술의 핵심입니다. 전북은 현대차 상용차와 김제 농기계 등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할 제조 기반을 갖췄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전환을 이끄는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이만호 기자